

보도시점 2025. 11. 4.(화) 14:00 배포 2025. 11. 4.(화) 10:00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 - 연구비 편취,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 총 940건·408억원* 적발

* 계약절차 위반 227건·322억원 포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김영수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0~'24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 >

① 연구비 집행 부적정 (421건, 8.4억원)

- 연구자가 허위 연구비를 청구하고 페이백 받아 사적으로 편취, 연구와 무관한 개인물품(스마트폰·상품권 등) 구매, 방만한 출장비·회의비 지출 등

⇒ **조치사항** 7.9억원 환수 (7개 사례 수사의뢰)

⇒ **제도개선**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행위 제재 수단 강화

②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 (339건, 381.4억원)

-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짬짜미) 의심 사례, 계약조건 무단 변경, 경쟁 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위반

⇒ **조치사항** 3,145만원 환수, 3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 **제도개선** 쪼개기 수의계약 점검 강화, 국가계약법 준법 교육 실시

③ 예산관리 부적정 (120건, 16.2억원)

- 잔여 사업비 소진 목적의 불필요한 물품 구매,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건물 리모델링·전광판 설치 등 사업비 목적 외 사용

⇒ **조치사항** 4,533만원 환수

⇒ **제도개선** 대학이 아닌 지자체 주도 예산관리, 지자체별 예산 차등 지원 등

④ 성과관리 부적정 (60건)

- 연구실적 중복 제출, 부실한 사업 성과물·결과보고서 방치 등

⇒ **조치사항** 210만원 환수

⇒ **제도개선** 중복수급 관리 및 불성실 연구자 제재 강화

1. 점검 배경

□ (사업개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 ’20~’24년)은 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 각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플랫폼(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의 핵심 발전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 개편, 지역정주인재 양성, 지역기업 애로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참여, 9개 플랫폼 구축

< RIS 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총 사업비	1,370	2,451	3,491	4,890	4,830	17,032
- 국비	945	1,702	2,428	3,408	3,357	11,840
- 지방비	425	749	1,063	1,482	1,473	5,192

□ (사업성과) RIS 사업으로 지역대학들은 대학간 교육인프라를 공유하여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된 커리큘럼(공유대학·과목)*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정주를 지원하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공유대학·공유과목 참여학생 수: 누적28,591명 / 이수학생 수: 누적19,968명

** 취·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누적72,367명 / 산학공동교과 이수학생 수: 누적3,249명

□ (점검 필요성) 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간 외부의 집행 점검이 없었고, ’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확대·개편*되는 점을 고려하여,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RIS(지역혁신), LINC(산학협력), HiVE(직업교육) 등 5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11쪽 참고)

○ 위법·부적정 집행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RISE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전국 9개 플랫폼 중에서 사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 울산·경남플랫폼(사업년도 '20~'24년), 충북플랫폼('20~'24년), 전북플랫폼('23~'24년), 3개 플랫폼의 사업비 5,244억 원에 대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 이번 점검을 통해 ① 연구비 집행, ② 계약관리, ③ 예산관리, ④ 성과관리 분야에서 총 940건, 408억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① 연구비 편취 등 부적정 사례

- (점검개요) 대학과 기업이 협업한 산·학 협업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 책임자(교수) 및 참여기업(민간)의 연구비 지출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 *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개별 대학과 개별 기업이 협업하여 연구 수행
 - 소과제 총 246개 중 30개(12.2%), 집행금액 총 1,549억원 중 8.4억원 (0.5%)의 부적정 집행 사항을 지적하였다.
- (지적사항) ① 기존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래처로부터 '페이백' 받는 등 허위 재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사례 72건(4.3억원),

< 허위 재료비 지급을 통한 편취 사례 >

- A社は 수입한 자율주행 농기계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래처에 부품을 개별 구매하는 것으로 꾸며 허위 재료비 지급(1.95억원) **사례 1** [👉 12쪽]
- B社は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구매단가를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책정하여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돌려받아 편취(1.56억원) **사례 2** [👉 13쪽]
- C社は 3년 전 개발 완료한 제품의 시제품을 새로 개발·제작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0.77억원)

허위 연구수행 사례



美00社 자율주행 농기계



A社 연구결과 보고서

구매가격 '뺑튀기' 사례



품의 가격 462만원



시중가격 약 40만원

- ② 사무용품점, 마트 등에서 명목상 연구재료를 결제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품권, 스마트폰 등 사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례 251건(3.1억원),

< 재료비 先결제 후 사적 이용 사례 >

- D교수는 교내 입점 업체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해당 업체를 '구매 대행'처럼 이용하여 아이폰, 무선청소기, 발마사지기 등 개인물품 구매(0.37억원) **사례 3** [14쪽]
- E교수는 지역 마트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누적된 금액을 '적립금'처럼 이용, 연구 종료 후에도 집행제한 품목인 주류를 포함한 생활물품으로 교환(1.16억원)
- 민간기업 F연구원은 회사 인근 사무용품점에 재료비를 결제하고, 실제로는 아이폰 12대, 갤럭시폰 5대, 상품권(70만원) 등 현금성 높은 물품과 게임기 등으로 교환(0.74억원)

실제 구매 요청 내역(이메일)	실제 구매 내역(이중장부)
1. 아이폰 15프로 맥스 512G, 대용량 티라미 1ea / 새벽배송 가능시 새벽배송으로 요청 https://www.coupang.com/vp/products/B335434673?itemId=24068312130&vendorId=610188073004&picType=COL_PIC&gclid=656549636296849629	

- ③ 이 밖에 개인일정이 포함된 해외출장, 회의비 사적 사용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 98건(1.0억원)을 적발하였다.

< 연구비 방만 집행 사례 >

- G교수는 학회 참석차 해외출장을 가면서 개인 일정을 위해 학회 개최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도시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외 도시 간 항공권도 연구비로 구매(685만원)
- H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연구비 집행 권한을 참여기업에 전면 일임하였고, 참여기업은 연구비로 사업과 무관한 수익 목적의 시제품 제작(3,980만원)

- (조치계획) ^(1차)지역RISE센터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월1회 이상), ^(2차)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정산, ^(3차)취약분야 정밀 현장점검 등 연구비 집행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완료**
- 연구자·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및 제재처분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부적정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적발된 부적정 집행금액 7.9억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 고의성이 큰 연구비 편취 7개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②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미준수

□ (점검개요) 기자재 구매,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에 대해 입찰자(민간)의 입찰 담합 여부, 사업단(대학)의 계약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 총 11,229건의 계약 중 339건(3%), 총 3,015.3억원의 계약금액 중 381.4억원(12.6%)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하였다.

□ (지적사항) 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로 의심되는 3개 사례 76건(47.5억원),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의심 사례 >

- 민간업체 I, J, K는 대표자가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서, 37건의 입찰에 대해 둘씩 짝지어 입찰하면서 번갈아 계약 체결(14.71억원) **사례 4** [☞ 15쪽]
- 민간업체 L, M은 6건의 입찰에 대해 L이 M의 들러리로 형식상 입찰 참여(10.66억원)

②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위반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36건(12.2억원),

< 계약 관리 부적정 사례 >

- 입찰에서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1.23억원)
- 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체결하거나, 제안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 체결(0.54억원)
- 공사량 증감이나 물가변동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1.66억원, 증액한 금액 633만원)
-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페널티 면제(8.74억원, 면제된 지체상금 2,512만원)

③ 경쟁입찰 회피를 위한 ‘쪼개기 수의계약’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 국가계약법 계약절차 미준수 사례 등 227건(321.7억원*)을 적발하였다.

* 계약절차 미준수 건의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부적정 사례 >

-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를 초과하는 계약을 분할하여 같은 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0.22억원)
- 독점공급업체임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증빙 미첨부(1.91억원)

□ (조치계획) 입찰담합·계약절차 위반 관련 환수 및 제재처분 사례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RISE센터 담당자의 준법 역량을 제고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적발한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혐의가 있는 3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입찰가격과 다른 계약 체결·지체상금 미부과 건 등 3,145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③ 예산관리 부적정 사례

□ (점검개요) 사업단(대학)이 각 플랫폼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관리 적정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지적사항) ① 잔여 사업비는 반납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마감에 압박하여 사업비 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례 29건(0.99억원),

< 사업비 소진을 위한 무리한 집행 사례 >

- N기관은 수행과제를 모두 완료하고도 남은 잔여 사업비를 소진할 목적으로 **프린터 토너, A4 용지 등 물품을 필요 이상으로 대량 구매**(0.99억원)
- O사업단은 사업비 총 49억원 중 회계마감일 하루에만 33.8억원(69%)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일부 지출 건은 서류 미비로 미집행된 사례도 발생

② 도서관 리모델링, 홍보 전광판 설치, 고가 기념품 구매 등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실상 대학교 예산 보조로 활용한 사례 58건(14.6억원),

<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사례 > 사례 5 [👉 16쪽]



도서관 리모델링 (8.5억원)



전광판 설치 등(1.55억원)



기념품 등 구매 (4.59억원)

③ 그 외에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필수서류 누락, 학생의 교수 서명 대필 등 집행 부실관리 사례 33건(0.6억원)을 적발하였다.

- (조치계획) 성과평가를 기초로 차년도 지자체별 예산 배분시 차등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개선 완료**
- 대학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대학의 RISE 사업 과제 선정 및 예산 배분을 심의·의결하여 사업비가 본래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선 완료**
- 또한, 사업비 목적 외 사용, 고가 기념품 구매 등 부적정 집행금액 4,533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④ 성과관리 부적정 사례

- (점검개요) 산·학 협업 연구 등 대학과 기업이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성과평가 적정 여부, 성과물 활용 적정 여부를 점검하였다.
- (지적사항) ① 다른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를 RIS 연구실적으로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 등 46건,

< 과제 결과보고서 중복 제출 사례 >

- P社は 전년도 완료과제의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진하자, 전년도 완료과제 결과보고서를 편집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 無 **사례 6** [👁 17쪽]
- Q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RIS 연구과제 수행실적에도 포함하여 제출

- ② 특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과제에도 중복하여 반영하였음에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 예산 중복 반영 사례 >

- R교수는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식재료가 불필요한 과제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로 다른 과제에서 동일한 성과물(밀키트 개발)을 중복 제출(3,928만원)

- ③ 이 밖에도 결과보고서나 과제 수행 성과물이 극히 부실하여 활용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 14건 등을 적발하였다.

< 성과물 부실 관리 사례 >

- S강사는 동영상 강의 제작을 위해 가족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결과물(동영상)은 PPT에 음성을 입힌 **조악한 수준**으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활용조차 하지 않고 방치**
- T교수는 사업비 8억원 규모의 교육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보고서에는 구체적 사업성과 없이 교육 횟수만을 단순히 기재하고 있으며, 분량도 3장에 불과**

□ (조치계획) 교육부 주관 RISE 사업을 통해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중복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선 완료**

* RIS, LINC,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사업 5개 사업

- 과제 추진시 불성실 연구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과제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제도 정비도 강력히 추진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정부합동 점검을 계기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환수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과 기관에 관련 사례를 교육·전파하고, 대학에게 예산 활용 및 운용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정밀 현장점검, 제재처분 등 사업비에 대한 다층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박찬주 (044-995-2075)
		담당자	조사관 전민규 (044-995-2077)
담당 부서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서기관 김희준 (044-203-6236)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주(定住)'의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플랫폼구축) 지역대학(주도), 지자체,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 참여
- (대학교육혁신) 지역산업 연계 융합전공 신설, 지역 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공유대학) 운영, 지역기업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 신설 등
- (지역혁신) 지역대학-산업체 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대학 인프라·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현안 문제해결 등 지역발전 지원

□ 사업규모 : 1조 7,032억원 (국비 11,840억원, 지방비 5,192억원)

□ 사업기간 : 5년 ('20년~'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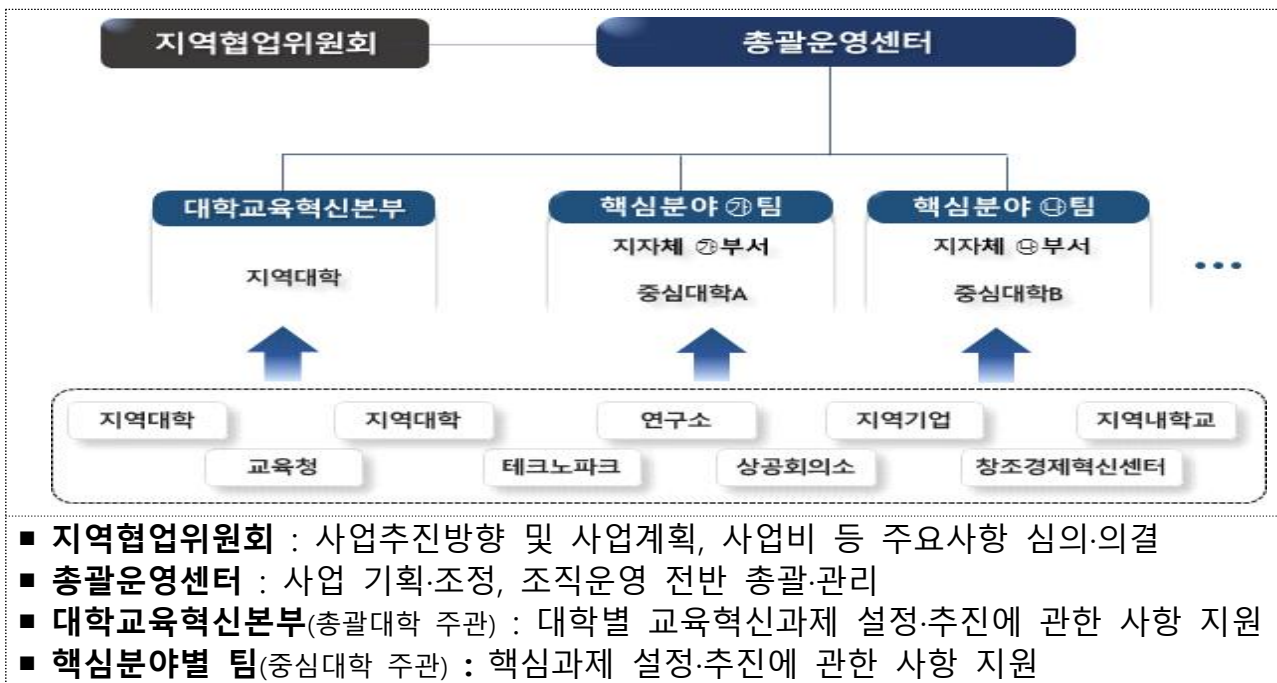
2. 지역혁신플랫폼 현황

※ 9개 플랫폼, 총 14개 지자체(비수도권) 참여

(단위 : 억원)

플랫폼 (사업연도)	사업단 (핵심분야)	참여대학	사업비 (국·지방비)
광주·전남 ('20~'24)	■ 에너지신산업 ■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 목포대 등 17개 대학	2,928
울산·경남 ('20~'24)	■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 미래모빌리티 ■ 스마트제조 ICT ■ 저탄소 그린에너지 ■ 스마트공동체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등 15개 대학	3,188
충북 ('20~'24)	■ 제약바이오 ■ 화장품·천연물 ■ 정밀의료·기기	충북대, 한국교통대 등 14개 대학	2,333
대전·세종·충남 ('21~'24)	■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 모빌리티 ICT	충남대, 공주대 등 24개 대학	2,587
강원 ('22~'24)	■ 정밀의료 ■ 스마트수소에너지 ■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대, 연세대 미래,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	1,349
대구·경북 ('22~'24)	■ 전자정보기기 ■ 미래차 전환부품	경북대, 영남대 등 22개 대학	2,072
부산 ('23~'24)	■ 스마트항만물류 ■ 클린에너지 ■ 친환경 스마트선박 융합부품소재	부산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등 14개 대학	871
전북 ('23~'24)	■ 미래 수송기기 ■ 농생명·바이오 ■ 에너지 신산업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10개 대학	825
제주 ('23~'24)	■ 청정바이오 ■ 지능형 서비스 ■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제주대 등 3개 대학	880

3. 지역혁신플랫폼 운영 체계



4. 주요 사업성과

① 대학-기업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 비수도권 전 지역 확산

※ ('20년) 3개 플랫폼, 4개 시·도 → ('23년~) 9개 플랫폼, 비수도권 전역

②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 지역 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공유대학, 공유과목)을 구성하고, 지역의 핵심 발전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융합전공 개설·운영

※ 공유대학을 통해 개설된 융합전공 수: ('24) 52개

공유과목 참여학생 수: 누적28,591명 / 공유과목 이수학생 수: 누적19,968명

- 지역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유도

※ 취·창업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누적72,367명 / 산학공동교과 이수학생 수: 누적3,249명

③ 산학협력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지원

- 개별 대학과 개별 기업을 플랫폼을 통해 연계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 협업 지원

※ 산·학 공동연구 과제 수: 누적688개 과제 / 참여기업 수: 누적(중복포함)5,970개 기업

< RIS와 RISE의 세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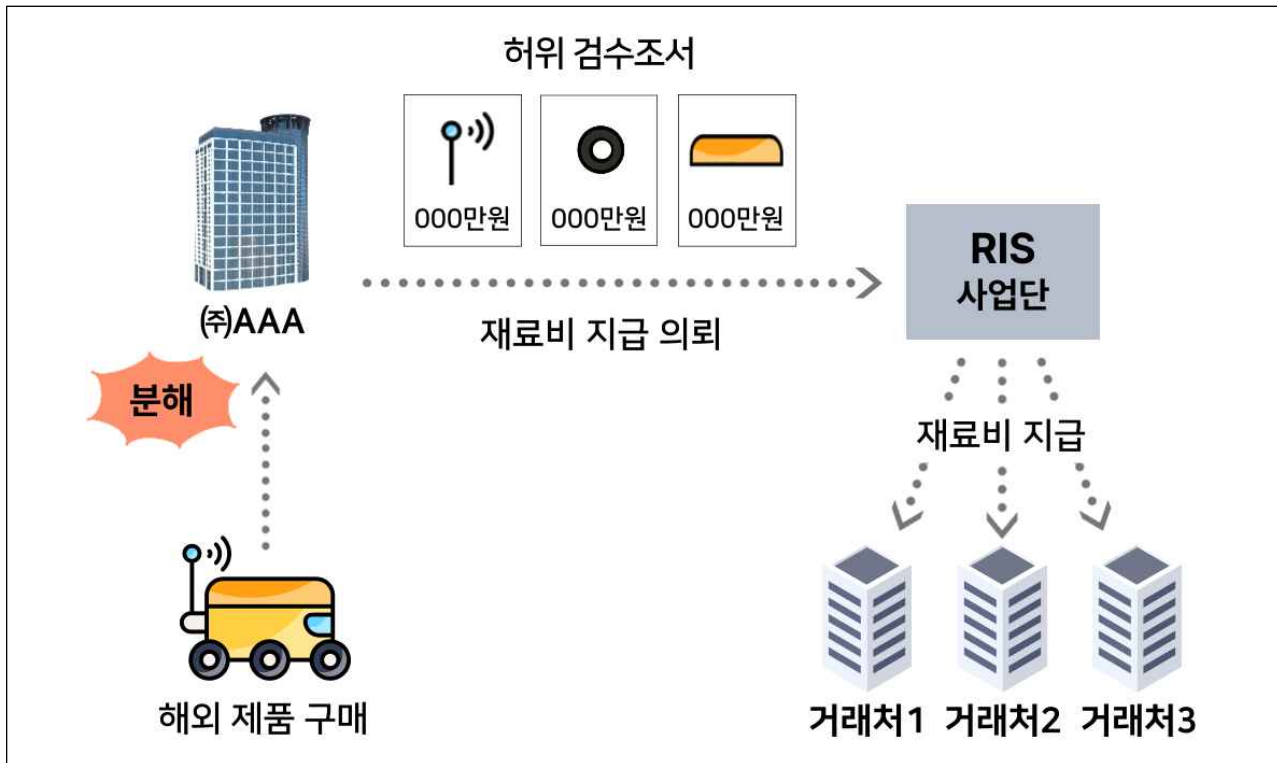
구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근거		「지방대육성법」 제21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 「보조금법」
목적		지자체-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핵심분야 기반 대학혁신·지역혁신 추진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재정지원 추진
사업분야		지역에서 선정한 핵심분야	RIS(지역혁신), LINC(산학협력), LiFE(평생교육), HiVE(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사업 5개 통합
	사업 기간	5년('20~'24년)	5년('25~'29년)
주체		대학(주도), 광역지자체, 기업 등 참여	광역지자체(주도), 대학, 기초지자체, 기업 등 참여
	지자체 역할	핵심분야 선정, 사업비 매칭, 사업공동관리 등	사업 총괄(사업기획), 자체 성과평가 * RISE센터를 통한 예산배분, 집행, 선정, 관리
	지역 범위	광역지자체 단일형 또는 복수형(초광역권의 플랫폼) 구성 가능	광역지자체(시·도) * 시·도간 초광역 연계 협력사업 가능
재원 규모		- '24년 기준 3,400억원 * 플랫폼별 재원 지원 규모 고정 (예) 단일형 300억원, 복수형 480억원 - 총사업비 30% 이상 지자체 매칭	- '25년 기준 2조 10억원 - 배분기준에 따른 지역별 국비 + 국비 대비 20%+α의 시도비 매칭
재원 집행		총괄대학 소속 총괄운영센터가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지역RISE센터(비영리법인)가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절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재정 지원 (공모 선정 평가)	17개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별 RISE 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참고2

주요 지적사례

사례 1 [연구비 부담집행]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 지급



□ 주요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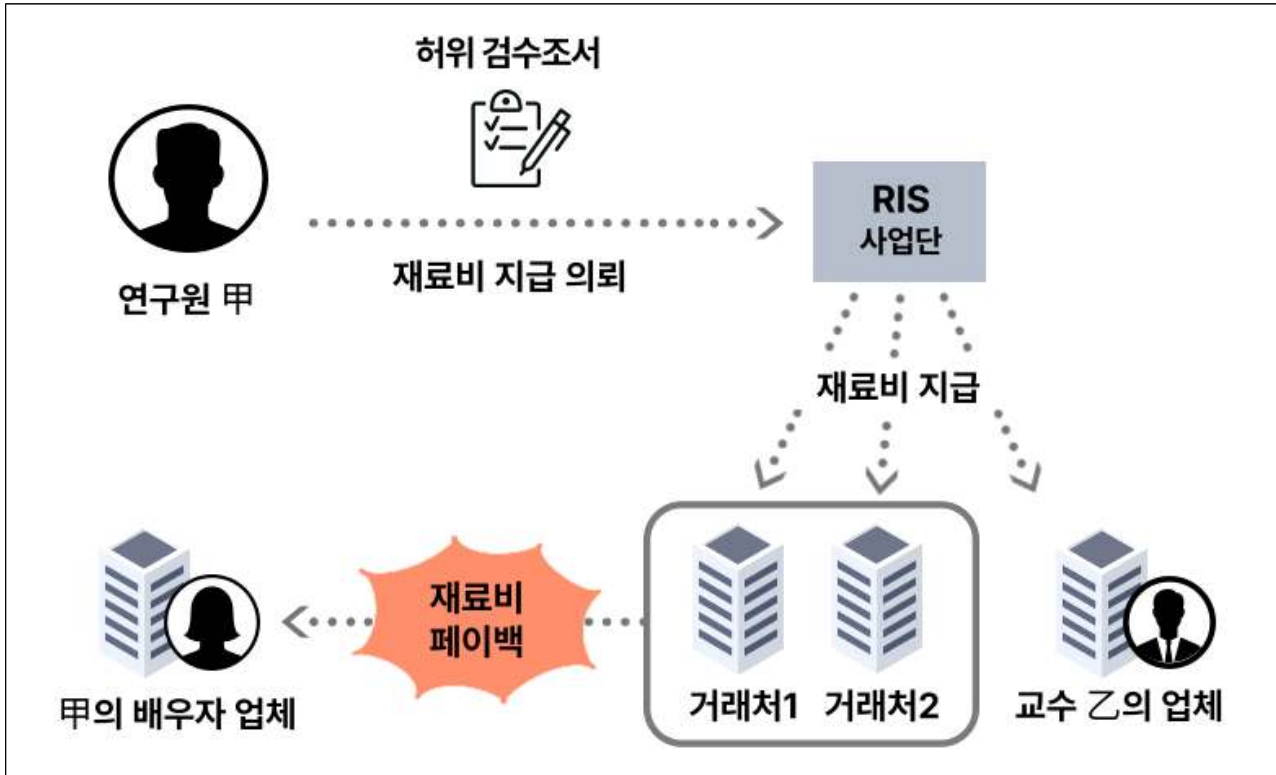
- 민간기업 (주)AAA은 「○○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 해외에서 수입해온 자율주행 기기를 마치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하고, 이를 분해하여 각각의 부품을 따로 제작·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거래처 24곳에 허위 재료비를 지급하는 등
 - 총 1억 9,510만원의 재료비를 편취

□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사례 2
[연구비 부당집행]

**거래처에 재료비를 지급하고 배우자 업체 등으로
다시 돌려받아 편취**



□ **주요혐의**

- 민간기업 연구원 甲은 「○○용 의료기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거래처 12곳으로부터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재료비를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업체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해당 금액을 전액 돌려받고,
 - 이 밖에도 공동 연구자인 대학교수 乙 명의의 업체로부터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하여 허위 재료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 총 1억 5,608만원의 재료비를 편취

□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사례 3
[연구비 부당집행]

**사무용품점에 재료를 선(先)결제하고
개인 용품을 ‘구매 대행’ 의뢰하여 취득**

○○○교수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서류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오후 1:46

○○○교수
네, 보내드렸습니다. 오후 1:47

○○○교수
아이폰 15 pro 256gb 구매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배송해주세요. 오후 1:51
○○대학교 ○○관
○○○호

○○○교수
네 알겠습니다. 구매 대금은 장부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51

○○○교수
네, 감사합니다. 오후 1:51

연구비카드로 재료비 결제
사업단에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

원하는 물건 구매 의뢰
이중장부에서 차감

아이패드, 무선청소기 등
사적인 물건 취득

※ 대화 내용은 재구성하였음

□ **주요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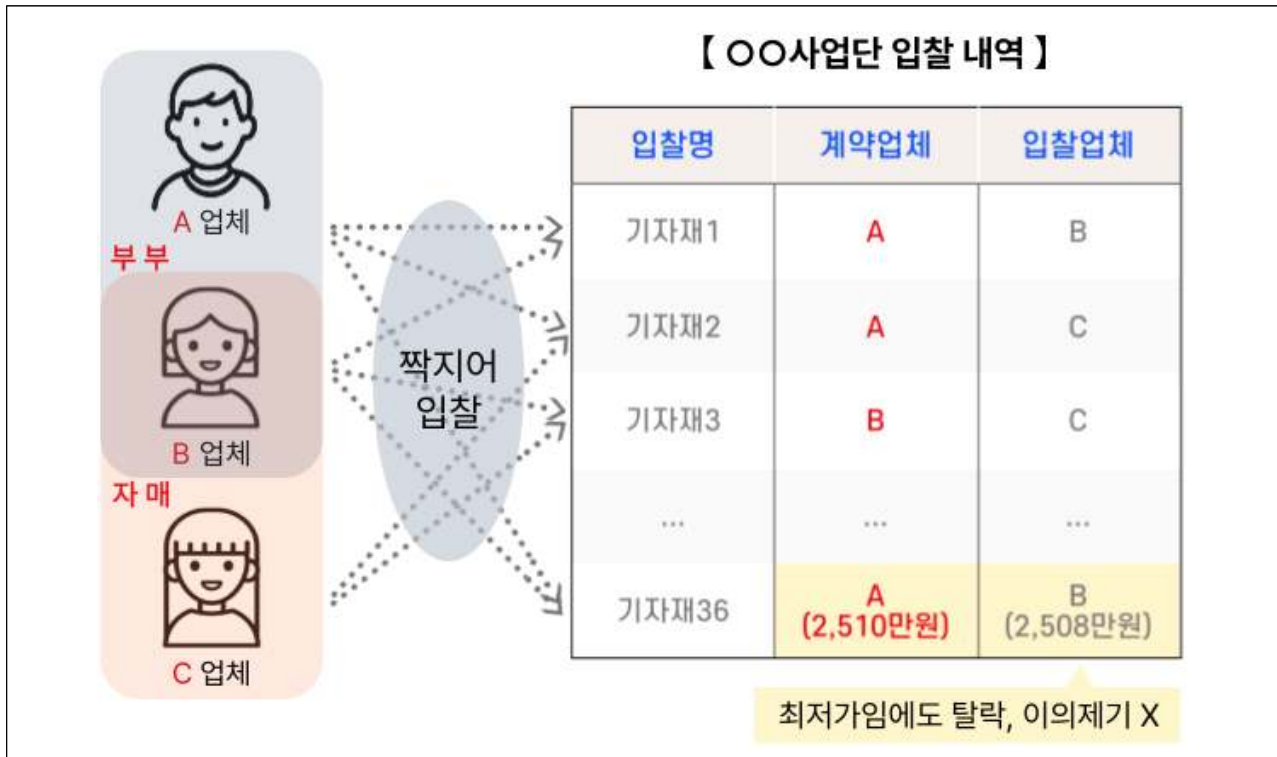
- C대학 丙교수는 교내에 입점한 컴퓨터용품점에서 연구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연구 **재료비**를 허위로 지출하고,
 - 실제로는 아이폰, 아이패드, 무선청소기, 발마사지기 등 **개인용품 구매**를 의뢰하여 연구실 등의 장소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 총 3,650만원의 재료비를 편취

□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사례 4
[부적정 계약]

**입찰에서 특수관계자를 둘러리로 내세운
부당한 공동행위 의심**



□ **주요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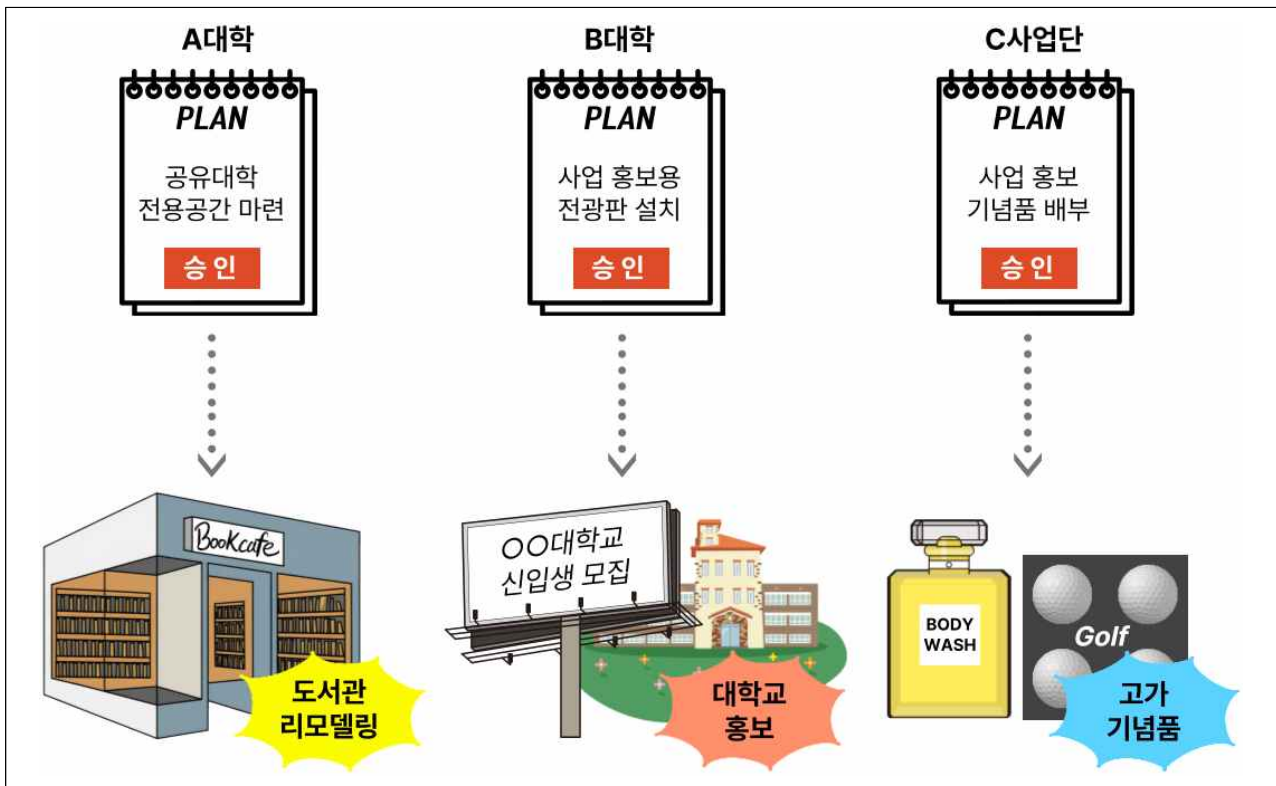
- 민간업체인 A, B, C는 총 37건(계약금액 총 14억 7,099만원)의 공개 입찰에서 **둘씩 짜지어 입찰**에 참여하고, 번갈아 낙찰받아 계약 체결
 - 이들은 서로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A의 대표가 B의 입찰대리인이자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로 동일한 서식과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 하였으며, 동일한 팩스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추정
 - 계약 담당자의 착오로 최저가 입찰자(B)가 아닌 차순위 입찰자(A)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담합 상황 포착**
 - 입찰에서의 부당 공동행위(담합) 의심

□ **조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예정

사례 5
[예산관리 부적정]

**RIS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이
사업비를 사실상 대학교 예산 보조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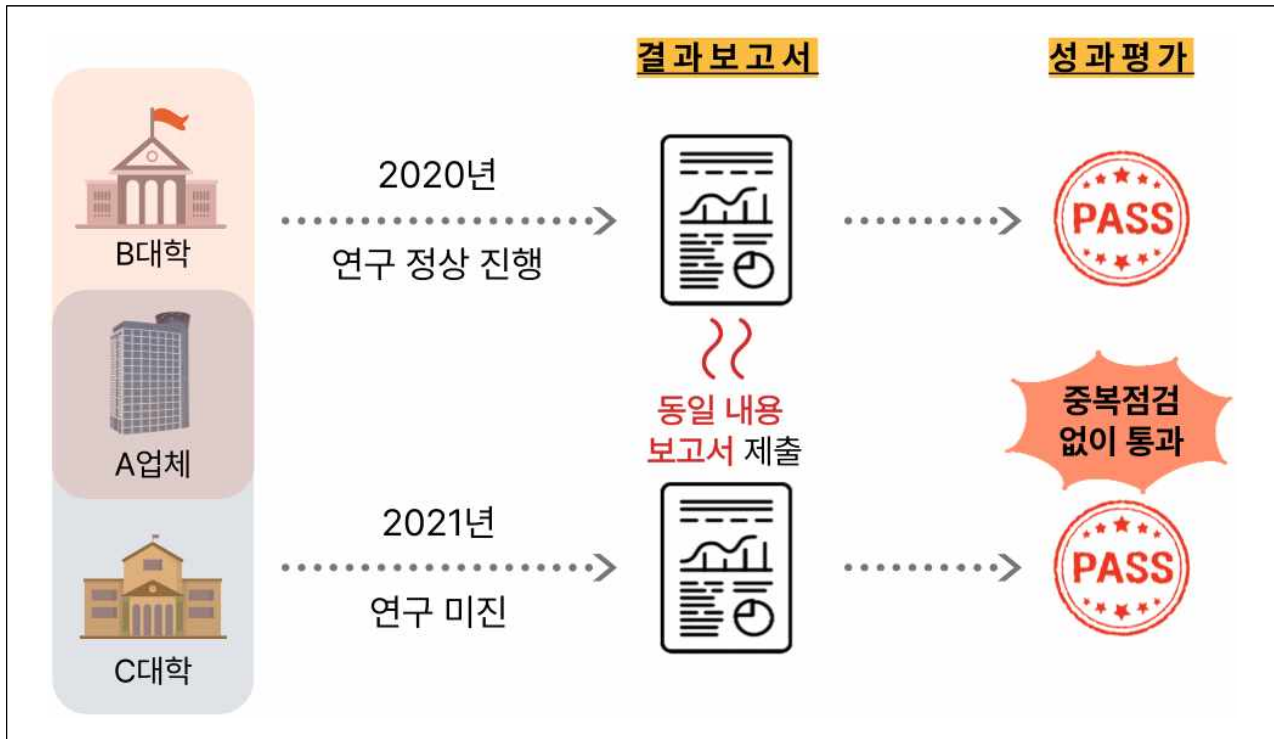
□ **주요혐의**

- 공사비·홍보비는 RIS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나,
 - A대학교는 RIS 사업비를 이용하여 동 사업과 무관한 일반학생들이 이용하는 개방형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도서관 리모델링에 사용
 - B대학교는 RIS 사업 홍보 목적으로 교문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학교 홍보에 사용
 - C사업단은 RIS 사업 홍보를 명목으로 골프공 세트(4구 15,800원), 바디워시 (100ml 38,000원) 등 고가의 기념품을 대량 구매하고, 관리대장 미작성

□ **조치사항**

-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및 제도개선 예정

사례 6 [성과관리 부적정]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심사 통과
---------------------------	---



□ 주요혐의

- 민간기업 A는 2020년 B대학과 OO용 유효변수 추출 과제를 완료한 후,
 - 2021년에는 C대학과 해당 기술에 대한 고도화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연구 진행이 미진하자 2020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성과평가 과정에서 기존 결과보고서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심사 통과

□ 조치사항

- 제도개선 예정